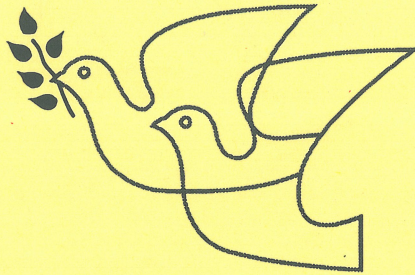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9)

기념 심포지움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일시 : 1999년 5월 25일 오후 3 - 6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관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겨레신문사,

아시아나항공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8)

기념 심포지움

알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일시 : 1999년 5월 25일 오후 3 - 6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관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겨레신문사,

아시아나항공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ona Womens Day for Peace and Dsarmament May 24)

기념 삼포지음 자료집

• 자료집 목차 •

1. 1999년 제3회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삼포지음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3
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란? /5
3. "5.24" 실천행동을 위한 제안들 /7
4. 한국여성평화운동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요약 /9
5. 한국여성평화운동과 "일미 신가이드라인" 왜 여성들이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문제삼는가? /11
6. "일미 신가이드라인" 관련 자료모음 /13
 - (1) 일미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신토차문모음 /13
 - (2) 연설문 "다-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통과를 반대한다(10당회)" /20
 - (3) 다-일 방위협력지침 경과 해설 (김문옥) /22
 - (4) 성명서 "일본군사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채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27
 - (5) 성명서 일미반역론 /29
 - (6)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 /32
 - (7) 일본의 신 [다-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미량동향 (외교통상부 동북아 12) /35
 - (8) 외교부 논평 "일본의 [신 다-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중의일 통과"(1999년 4월 29일) /37
 - (9) 일본의 [신 다-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논평(4.29)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동언론 /38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9)

기념 심포지움

- 날짜 : 5월 25일 오후 3시 - 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사회 : 이현숙 (평화물민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주제강연 1)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김영희 (본회 지문위원,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2)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일본 NGO의 대응
 쓰와 게이코 (津和 慶子, 일본부인회 회장)
- 토 론 1) 미군의 군사전략과 동북아 군사화
 이남성 (카톨릭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2) 일본의 군사력 역할증대와 한반도
 배정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3)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입장에서 본 일미 신가이드라인
 김문옥 (평화물민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주관 : (시민법안) 평화물민드는여성회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겨레신문사, 아시아나항공

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란?¹⁾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1980년대 초반 유엔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운동가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군비경쟁에 대항하여 연대를 통한 평화추구를 위해 활동하기를 원했다. 이들의 초점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세계의 문제들을 각 도시와 마을로 연결시키는 행동이었다. 이후 여러나라의 여성들이 참여하였는데, 1983년 한해만도 약 1백만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5.24"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뉴질랜드만 제외하고는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뉴질랜드여성들은 1996년 부활절 때까지 "5.24"를 지켜왔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세계여성대회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IPB(the International Peace Bureau)와 IFOR(th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에 대한 의식과 참여증진을 요청한 베이징 NGO대회의 평화천막(Peace Ten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1996년 5월 24일에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캐나다,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칠레, 오스트리아, 잠비아, 뉴질랜드의 여성들이 실천적 행동과 더불어 이 날을 기념하였다. 이 실천들은 평화와 대인적 피해자를 위한 긴급마련에 관한 여성들의 공헌을 소개하는 라디오방송에서부터 핵무기의 폐지를 위한 집회, 군사주의에 대항하는 거리행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8*, IFOR & IPB, p.2.

3. "5.24" 실천행동을 위한 제안들²⁾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한다.
- 입법자들(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여성, 평화, 정의 문제를 위해 일하거나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해본 것을 언론에 전달한다.
- 지역조직이나 다른 나라의 조직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금모금가들을 조직한다.
- 헤이그평화회의(the Hague Appeal for Peace: 다음세기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결집된 모임)에 참여한다.
- 여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다. 여학생 그룹들과 어떻게 전쟁과 평화에 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눈다. 그들과 함께 정부관리나 다른 여성들에게 이에 관한 "평화의 편지"를 쓰도록 한다. "평화창조"에 관한 아이디어를 표현한 글을 모으는 옛새이 컨테스트를 실시한다.
- "유엔의 세계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문화·비폭력 10년"(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2001- 2010)을 지원한다.
- IFOR과 IPB에서 공동으로 펴낸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자료집을 활용한다.
- 각 단체들에게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대해 알린다.
- 도서관들이 여성평화운동가들에 대한 책들을 비치하도록 권유한다.
-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5.24" 기념 공개토론회, 시위, 영화상영 등을 실시한다.
-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프로그램을 조직한다.

2) 참고자료,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9*, IFOR & IPB.

- 지역공동체에 있는 간동의 당사자들을 “5.24”에 초대하여 공동체와 이웃에서 긴장을 풀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들에 연대의 편지를 보낸다.
- 각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의 자료들에 여성평화운동단체들도 소개시킨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IFOR이나 IPB로부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FOR)

Spoerstraat 38, 1815 BK Alkmaar, Netherlands

Email: office@ifor.org

Website: <http://www.gn.apc.org/ifor/>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41, rue de Zuerich, 1201 Geneva, Switzerland

Email: ipb@gn.apc.org

Website: <http://www.itu.ch/ipb>

4. 한국여성평화운동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요약

● 제1회 1997년 행사

- 장소: 명동성당 앞
- 주제: 북한여성들기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 내용: 1) 평화 선언문 발표

2) 평화로운 세상을 촉구하는 행사

1997년 5월 당시 진행 중이던 북한들기를 위한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거리모금을 본 행사와 결합시켜, 기근당한 북한여성을 돕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남북평화와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였다. 이 날 거리모금액은 504,830원이었고, “밥나누기 사랑나누기”의 전체 모금액은 북한여성들에게 분유 26톤으로 전달되어(1997년 8월 27일) 어린이와 산모들에게 분배되었다.

● 제2회 1998년 행사

- 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주제: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
- 내용: 1)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2) 여성평화 한마당

3) 거리 홍보 및 국방비 삭감을 위한 열서쓰기

4) (부대행사)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우리손으로”

본 행사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10개의 평화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행사 당일 이후 1999년 당위비 예산 삭감과 삭감예산의 실리노동자, 어린이,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열서를 청와대에 보냈다(약 일만 통), 또한 300여 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일부·국방부 장관, 미국대사,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냈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행사와 거리캠페인을 전개하여 평화군축과 방위비 삭감 등을 여론화시켰다.

5. 한국여성평화 운동과 “일미 신가이드라인”

왜 여성들이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문제삼는가?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는 올해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주제를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로 정했다. 여성평화운동에서 추구하는 여성과 평화라는 보편적 개념과 “일미 신가이드라인”이 지니는 주제의 특수성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여성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념에 기초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첫째는 여성과 평화의 본성론 혹은 전통적 성역할의 결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평화지향적이 되었다는 것. 이른바 여성평화론에서 이 두가지 논의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여성평화운동의 현장에서는 중요한 주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여성학 등의 이론적 담론의 논의의 축적을 통해서 전개될 것이다.

둘째, 여성들이 무력분쟁과 전쟁의 최대 피해자이므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크든 작은 무력분쟁을 통해서 최대의 희생자가 되어왔던 것은 현재의 코소보 사태 및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경우에서부터 일제 시대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내몰렸던 것을 상기할 때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성들은 한 번도 전쟁수행의 결정자 그들에 속해본 적이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과 희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보다 적극적인 평화의 수호자, 평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성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은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첫째, ‘코소보 사태’가 멀리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컴퓨터 게임의 원격조정을 즐기던 나토군이 유고연방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대사관까지 폭격할 것을 상상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연이은 폭격과 파괴, 죽음과 난민행렬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유학생들이 미국대사관에서 항의대모하는 대서도, 이 지구상의 민족분쟁과 갈등이 얼마나 밀접해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 “일미 신가이드라인”에서 한국을 비롯한 북한, 중국 등 동북아 여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이른바 “주변사태” 관련법이다. 일본은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주변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석하기 나름이며, 또 긴급한 경우에 는 국회의 “사후승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 땅에 “미군의 후방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발을 내딛게 되어있다.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상황이 무력대결로 이어지는 데는 남한과 북조선의 의지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군의 군사전략의 이해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걸프전쟁과, 미국의 이라크 제징동, 그리고 이번 코소보 사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아왔다. 여성들은 한반도의 현재의 상황이 단지 직접적인 무력분쟁 혹은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 보다 더 긴박한 “억제된 휴전”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분단의 세월을 통해 다양한 군사문화적 유산에 의해 희생되어 온 여성들은 여성의 희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또 하나의 남북전쟁,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이번의 [일미 신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일미 신가이드라인]은 동북아의 군사화를 더욱 더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여성들은 반대한다. 이미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일미 신가이드라인]의 중의된 통화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일본과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특히 북한은 “방위지침 법안이 성립될 경우 미-일 군사적인 결타이 더욱 강화돼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비난했다(4월 26일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일미 신가이드라인]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때, 이 지역의 각국이 군비를 증강시키는 등 군비확산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군비확산의 물결은 국가예산의 20% 이상을 군비로 지출해오면서 교육, 복지, 경제 부문의 회생을 가져오고 있는 남한에 더 큰 군비지출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IMF의 통화 관리체제 하에서도, 전력증강비는 국방예산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30.1%)을 차지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사업이 북한 지체보다는 중국적으로 한반도의 주변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한 역시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확산에 남한과 북한도 동참하고, 이는 남북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군비확대, 군사화, 군사주의가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빈곤화, 정치·사회적 소외, 문화적 폭력 등 거대한 회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절충되는 군사화의 흐름은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일미 신가이드라인]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가져올 이른바 반평화적 폭력성에 대하여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여성들은 [일미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을 통해 국경을 넘어평화의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전후의 “평화헌법”의 실질적 제기를 의미하는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공동으로 이에 반대하는 모임, 시위, 행사 등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 시작되는 2천년대의 첫 10년을 “비록퍼·평화문화의 10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유엔과 세계평화운동의 흐름에 또 하나의 연대의 모범과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평화운동은 70년대 원폭피해자 돌기운동, 일본대 제일한국인 인권문제, 80년대 반핵운동, 90년대의 남북여성교류, 정신대 문제 등의 주제로 이미 30여 년 동안 긴밀히 연대해 왔다. 이번의 [일미 신가이드라인] 반대운동은 그 연대의 전통 속에서 각자 자국의 패권주의적이라 군사주의의 흐름 속에서 공존과 공생의 평화세상을 지향하는 대안적 목소리를 함께 내는 계기이고 이를 통해서 여성평화운동의 지평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수(평화물민드는여성회 정책국장)

6. “일미 신가이드라인” 관련 자료모음

(1) 신문자료 모음

일미 신가이드라인어판³⁾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구체적인 운용체계라 할 수 있으며, 그 관련법안(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탄생과정은 2차대전후 전승국 미국이 자신이 주도해 만든 패전국 일본의 평화헌법을 어떻게 스스로 부정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교본과 같다. 미일 양국은 이런 측면을 가리기 위해 일본헌법과 안보조약에는 손대지 않은 채 현실 운용에서 하위체제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법안을 모법보다 사실상 우위에 두는 편법을 동원했다.

현행 일본헌법은 원칙적으로 군대의 보유나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 동맹국과의 공동무력대응인 집단자위권행사 등을 모두 부정한다. 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에 경찰 예비대 창설을 지시함으로써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고(52년 발효), 60년 이후 재정을 저치면서 미군의 일본주둔과 자위대 창설 및 공동군사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70년 이후 미일안보조약은 대내 자동연장되는 쪽으로 변경됐으며, 이의 구체적인 운용을 위해 탄생한 것이 78년 미일방위협력지침(옛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안보조약 규정대로 “일본국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외부의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5조1항)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일본주둔도 “일본의 안전 및 국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 (6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됐다. 이는 옛소련의 일본침공 등을 상정한 냉전시대를 대응치제였다.

그러나 냉전 붕괴로 주적 소련이 사라진 뒤 겉트전쟁과 북한 핵위기 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미일안보동맹체제 확대강화를 아시아 전략의 근간으로 삼는 등아시아전략보고를 작성(95년)했다. 일본은 같은 해에 신방위계획대강으로 호응했다. 그 종합관이 96년 4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전 일본총리가 발표 한 미일안보공동선언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운용체제가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지금의 새 가이드라인)이다.

97년 9월 확정된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유사’사태보다는 ‘일본주변유사’ 사태 대응에 중점

3) 한겨레신문 4월 일

을 두는 쪽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미군 후방 지원 명목으로 활동영역을 일본 바깥으로 무제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관권법안이며, 그것은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개정안, 미일물품유역상호제공협정(ACSA)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로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한 주변사태법안은 일본이 미국에게 보급, 수송, 수리, 의료, 화역 등을 지원하고 조난미군 수색구조, 외국선박 검사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공항과 항만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제도 협력을 하도록 규정해 '미국 전쟁수행협력을 위한 국가총 동원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한겨레신문 4월 27일

사설: 일본 주변사태법의 문제점

일본의 자민·자유·공명당 등 3당이 26일 그동안 일본 정치권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등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해 중의원 가이드라인 특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3당이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5월 하순까지 국회통과가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이로써 미국은 아시아전략의 초석인 일본과의 동맹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보수세력도 자위대의 위상과 역할강화라는 숙원을 풀게 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를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정세에 만단할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3개 법안중 핵심인 주변사태법안은 우리의 각별한 경각심과 주의를 요구한다.

먼저 이 법안은 일본자위대의 집단자위권 발동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 주변에 유사사태가 벌어져 미국이 군사개입을 할 경우 일본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다. 말이 미국에 대한 후방 방장지원이지 사실상 일본자위대의 집단자위권 발동과 해외파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항구적 포기와 오로지 일본영토만을 지키는 전수방위를 규정한 평화헌법은 이 하위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다.

다욱 명량한 것은 '주변사태'가 한반도 유사사태를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일본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연합군, 유엔군, 미군 단독 등 어떤 형태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든 일본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령 북한에서 내전이나 쿠데타 등이 터져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미군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가지 가상사태와 관련해 몇가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 연합군은 당연히 반격을 하겠지만, 이 경우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사태법에 근거해 미군지원의 형태로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국단

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고 일본이 병참 지원에 나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미국은 이제 일본의 든든한 병참지원을 확보한 만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방적으로 일으키지 않을 확실한 보장이 없다. 미국은 지난 94년 북한 핵위기에 극비리에 선제공격을 검토한 전력에 있다. 최근 미국 주도 나토의 유고공습도 결코 강간녀 불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한국정부 입장 매우 신중...논쟁유보

일본의 주변사태법 등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 관련 3법의 중의권 통과를 보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정부는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본통역무상호제공협정 개정안 등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는데도 '28일부터 시작될 참의원에서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공식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 법이 가지는 상충성 때문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북한과 한국이 현실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강화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나 아직 일본의 참일이 경쟁한 국민들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쉽게 받아들이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일간의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앞으로는 일본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일간 신뢰구축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월에 한일해군간 수색·구조활동을 벌이는 것도 그 초보적인 단계이며, 앞으로 이런 안보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 가이드라인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일본쪽에 △무명성을 보장하고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건립히 협의해야 한다는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변사태법 가운데 사실상 한반도 사태를 말한다곤 볼 수 있는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 즉 '준유사' 조항에 대해서도 "일본 헌법이 집단자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우리와 협의과정에서 전수방위 3원칙의 틀을 지켰다고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 외국의 영해 안에서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조난자 구조를 가능하도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우리의 이해를 얻어야 될 사항이고 일본도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라고 맹렬히 반발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등 관련 국가의 반응과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정부가 미·일과 협력을 속에서 북한을 개방하고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겠다는 포용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일본의 가이드라인 관련법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냉기류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대규 기자

【도쿄=한승동 특파원】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마일 안보동맹강화 등 양국간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미국 방문길에 나선다.

다음달 3일 별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1주일간 미국에 머문 뒤 5일 귀국하는 오부치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일본총리의 미국 공식방문으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이래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오부치 총리는 이번 방문중 클린턴 대통령에게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처리내용을 설명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용고사태와 관련한 대미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등 두 나라 안보동맹관계 강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들은 또 일본의 경기대책, 무역마찰, 아시아 경제위기 대처방안 등 경제현안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의 발걸음은 최근 일본 역대총리들의 어떤 방미에 비해서도 가볍다.

5월3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의 초점은 미·일 안보동맹체제 확대강화 재확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오부치 총리가 이를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처리라는 확실한 '선물'을 들고 가기 때문이다. 미국도 자민·자유·공명(자자공) 3당의 국회 다수와 연합체제를 통해 대미협조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오부치 정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무역마찰이나 일본 추가경기대책, 아시아 경제상황 공동 대응 등 경제문제도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26일 회담에서 일련 주요7개국(G7) 재무·중앙은행총회 회에서 이미 상당부분 걸려진 상황이다. 게다가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동행하는 경제인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처리는 95년 미국이 냉전종료 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아시아전략을 재정립한 '동아시아전략보고' 발표 이래, 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97년 9월 가이드라인 합의로 이어진 미-일 안보동맹체제 확대강화작업을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방위 중심개념이었던 미-일안보조약 자체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실상의 개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의 양국정상 회동은 이를 마무리하는 선언적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안보동맹체제는 미국 안보전략상 유럽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더불어 쌍두마차와 같은 존재다. 유고사태처럼 유럽쪽에 주일 미군 군사력의 일부까지 이동해 전력을 집중할 경우 아시아쪽 공역을 지위해 전력이 일정부분 배우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지위해 역할은 무제한 확대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자청했고, 오부치 총리는 이번 방미중 2억달러 규모의 유고난민 및 주변국 지원금 각출을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거듭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에서도 두 나라간 이견은 없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하와이 고위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체제 굳혀온 이미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일본 국내외에서는 오부치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맹목적인 정도의 대미추종 자세와 평화헌법체제의 포기,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대한 러시아 쪽 반발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국쪽 대응조치 등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냉전질서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 대북억제 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미-일 안보동맹체제 확대강화의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처리과정에서 확립된 자자공 3당연합체제를 토대로 9월 자민당 총선거 이후까지의 장기집권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오부치 총리에게 가이드라인이란 선물을 매개로 미국의 지지를 얻어 '식은 피자'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 또한 일본쪽 자자공체제를 환영하고 있다. 도쿄/한승동 특파원

【도로·한승동 특파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일본 중의원 통과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를 무시하고 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노린 관련법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국제정세가 긴장완화쪽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 지역 안전에 새로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외교부는 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대만을 주변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중일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 간부는 이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에 대해 “일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다스통신>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북한도 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방위지침법안이 성립될 경우 미일 간의 군사적인 결탁이 더욱 강화돼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쟁은 싫다. 헌법9조를 지켜라. 신가이드라인법 반대 여성 대집회 준비회’ 등 여성 단체들은 다음달 7일 도쿄 히비야 아외음악당에서 가이드라인 반대 여성 대집회를 연 뒤 국회의사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28일 긴자 등 시내에서 가두선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들은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 최종통과를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신가이드라인과 그 입법화에 반대하는 국민연합회’ 등이 히비야 아외음악당에서 5천명(주최측 발표)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중의원 본회의장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가 법안 가결 순간 “반대” 등을 외쳤다.

그러나 제임스 루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법안심의 진전을 환영한다. 성립되면 미일은 모든 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법의 조기성립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표명했다. 또 대만 국방부도 27일 관련법안이 “경고적인 작용을 하며 대안회담 환경에 기여한다”고 환영했으며, 국민당 간부는 “대만 해협이 주변사태에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미·일가이드라인] 정부 “긴밀한 사전협의 기대”

정부는 29일 일본의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3법안의 중의원 통과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이 일본의 주변사태 발생 때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군의 군사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법안의 운용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의 영역과 관련된 사항과 주권적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 앞으로도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성있게 이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대규 기자

[일본] 오부치 총리언론 회담 때 북·미일협의체 제안할 듯

【도쿄=연합】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다음달 3일 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북한 3국간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니혼케이자이신분>이 29일 보도했다.

오부치 총리는 현재 북·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협상에 일본이 새로 참여하는 형태로 3자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부치 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국간에 이뤄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협상을 일본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 협의로 확대할 것도 요청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일본의 3자 미사일 협의 제안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이 일본 안보에 관계되는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직접 관여하는 한편 북한과 새로운 대화의 창구를 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2)연설문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통과를 반대한다.」⁴⁾

이장희/한국외대 교수·국제법

19일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주요한 방한목적 중의 하나는 현재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 심의중인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을 한국정부에 설명·이해시키는 일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란 미국의 아시아전략보고서(1995)에 호응해 미·일이 공동으로 96년4월 발표한 '미·일안보공동선언'에 근거 한 것으로, 미·일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다. 이 공동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3번째로 최종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이 97년 9월27일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국내외의 역론을 의식해 이 미·일방위지침의 국내시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안 심의를 미루어오다가 북한의 인공위성 위협을 계기로 고양된 국면의 보수정세를 이용해 드디어 지난 12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했다. 지금 일본의 정치권 분위기를 보아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탈냉전 이후에는 일본의 유사사태에서 일본주변부의 유사사태(한반도 유사사태)로 확대 적용 되도록 바뀐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미군의 작전을 돕기 위해 한국인의 피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국가영역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판단주체가 사실상 한국이 아닌 미군측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사태 결정여부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이해에 따라 판단되기 쉽다.

과거 식민지라는 악몽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어떤 명분으로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나아가 지나친 미·일안보동맹체제의 강화는 일본 군사대국주의의 아시아 전역 확대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자극하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긴장조성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조성에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적극적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지는 근본적으로 미·일, 북·일 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보다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북

4) 본 연설문은 지난 4월 15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8회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일미 방위협력지침(신카이도라인) 설명회 및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것이다.

한의 인공위성 시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일본 우익정권의 군사대국주의를 확대하고 미국 강경파들이 미국군수제비의 이해를 증폭시키는 데 한반도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도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미-일방위 협력지침에 강한 반발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과거 1906년 미-일간 가쓰라대프르밀약과 53년 샌프란시스코평화 조약에서 미국의 일본 편향적 외교는 한반도 운명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망은 분단의 사슬을 끊고 금세기내에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과 미국이 우리 민족의 소망인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비극을 자초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원컨대 일본 주변 유사시에 한국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한국과 협의하도록 사전협의조항의 제도와 등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불행한 역사가 두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오부치 총리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현재 중의원 본회의에서 논의중인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중 한반도와 관련된 유사사태를 상정한 '주변사태법안'을 즉시 철회해주길 바란다.

(3)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경과해설*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960년 안보개정과 미일군사협력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개정된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미일간의 군사협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는 '일본국 행정하의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무력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미일이 협력하여 전투를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은 그러한 사태를 상정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대미군사협력으로 전쟁에 말려들 것을 더 염려했다.

그 당시 미국은 월남전쟁에 군사개입을 하고 있었고 한국이나 기타 미국의 동맹국들이 부득이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70년대 중반이었다. 73년에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했고 75년에는 월남전이 끝나서 세계적으로 긴장완화(대탕트)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대이다.

75년도 미일수뇌회담(미끼수상/포드대통령)의 합의를 거쳐서 '방위협력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76년). 이 소위원회에 속한 군관 기관들을 통하여 미일의 군사공동행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은 미일안보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가이드라인의 생략과 그 내용

'방위협력소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가 가지고 있던 제동장치는 완전히 이완되었다. '전쟁포기' '전투력을 가지지 않는다' '고전력을 인정하지 않는다'(평화헌법 제9조)와 비핵 3원칙(핵을 만들지 않고 가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에도 저촉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핵전력지상주의인 미군과 공동행동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1978년 11월에 제정된 '미일방위협력의 지침'(이하 가이드라인 78)에는 "연구 협회의 대상으로 하지않는다"라고 이들 제약에 대해 언급하며 피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78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일본을 침략할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미일간에서 어떠한 군사협력태세를 취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이 적절한 자위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언제나 미군이 원군으로 달려 올 태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핵공격을 받지않도록 미군의 핵우산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부터 '공동자결의 연구'를 하고, '공동연습'이나 '공동훈련'을 충분히 해

5) 본 경과해설은 지난 4월 15일의 설명회 및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이다.

야 한다고 되어있다.

둘째부분은 일본에 대해서 실제로 무력공격이 행해지는 사태가 되었을 경우, 미일간에서 어떠한 협력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해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정적 그리고 소규모의 참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이 혼자서 배제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국의 협력을 얻어서 배제한다.

셋째부분은 일본 밖의 국경에서 미군이 싸우는 경우를 위해 미리 '일본측으로부터의 편의 제공의 방법'에 대해 연구하자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 78의 성과

가이드라인 78의 성립이후 미일의 군사전략관계는 공동작전계획과 공동연습의 실시를 통하여 급속히 긴밀해졌다. 1978년에 가이드라인78이 각료회의에서 인준되자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日本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연구는 84년에 최종안이 완료되어 나가소대수상에 보고하여 방위청에서 미일 양군대포에 의한 서명식이 있었고 '미일공동작전계획안'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공동연습은 그동안 국민의 눈을 피하여 비밀리에 행해졌는데 가이드라인78이 제정된 이후에는 항공자위대는 재일미공군과 매월 1회정도의 전투기전투훈련을 실시했고 해상자위대도 미일공동연습의 확대를 실시했다. 1980년도의 '합작연습'에의 참가가 그것이다. 당시 '합작연습'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해군이 중부대평양에서 행하는 합동연습이었다.

가장 늦은 것이 육상자위대였다. 국민의 눈을 피해야 함으로 81년도에 통신훈련(자위대 100명과 미군 60명)을 시작으로 '저위소훈련'도 했고 또 '실제로 부대를 움직이는 연습(자위대 500명, 미군 200명)도 실시했다. 최근에는 미일 합하여 수만명 규모의 실동연습(實動演習)이 실시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88년 이후부터는 석탄, 연료, 탄약, 통신, 수송등의 병참지원의 상호제공을 의무화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을 요구하여 96년4월15일에 체결했는데 단 그 내용은 평상시의 훈련이나 공동연습시에 한정되어 정해진 물품이나 역무를 상호제공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있다.

냉전종결과 군축의 흐름

90년대로 들어서자 가이드라인78에 근거한 미일공동작전계획연구나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던 유사일법 연구는 모두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89년말의 미소수뇌회담(말타섬)에 의한 '냉전종결선언'은 두 전영대립구도가 소멸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동서독은 통일되었고 소련

도 해제되었다. 이리하여 냉전의 속박에서 해방된 구미각국에는 군축의 흐름이 정착하는 듯이 보였다.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평화의 수당'을 요구했고 여기에 응답하여 대륙적인 병력삭감과 국방비 감축이 실시되었다. 미군의 총병력은 90년도의 약 210만명에서 150만명(96년)으로 삭감되었다. 유럽의 미군은 3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삭감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삭감은 극히 소폭으로 실시되었다. 미국방성은 90년4월에 발표한 보고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이 지역의 미군을 삭감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제1단계에서는 재일, 재한, 재필리핀 합하여 약 11만명이었던 미평택에서 15000명만을 삭감했다.

그리고 제2단계의 삭감은 명목적인 것이 되었고 제3단계(96-2000) 삭감은 취소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생긴 것과 이학공격을 통해서 재일미군기지의 가치를 다시 안정하게 된 것과 재필리핀기지에서 미군의 철수(92년)등이 있었다.

한편 미군 안에서도 조금한 병력감축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군축으로 타격을 받는 미군 수산업의 저항도 있었다. 소련연방의 해제로 '유일한 초대강국'이 된 미국은 지역분쟁이 빈발하는 냉전후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속 세계외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언제든지 지역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미일안보 재검검과 새로운 방위계획

크린튼정권 말속이후, 미국방성은 소련해체 이후의 대외전략과 미군사력의 철저한 재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묶은 것인 미군재편계획 '비통암 리류'(93년9월)는 이학과 북조선을 두 개의 잠정적 적국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대규모지역분쟁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유럽에 10만명, 일본 한국등지에 10만명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일안보조약은 원래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재일 미군기지를 확보하며 일본에서 보다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세계전략에 과장을 맞추어서 미일안보조약을 재검검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리하여 94년 가을부터 미국방성의 조셉 나이차판보를 중심으로 일본측과 밀접히 협의하며 만들어진 것이 95년2월에 발표된 두 개의 보고서, '동아시아태평양전략보고'와 '미일안보보장관계보고'이다.

일본측 당국도 미일안보 재검검은 바라던바였다. 외무당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회

원이 되기위한 상황안들기로 '미일공동평화안정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본격적 참가 등 군사적 국제공헌의 확대를 노리고 있었다.

뉴가이데라인은 미일안보체제에 대해 두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직접적 의의로 '일본의 안전을 위해 불가결'이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간접적 의의로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의 주변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부여이다.

이러하여 96년4월17일 미일 양수뇌가 서명한 '미일안보공동선언'으로 미일군사협력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합의에 근거하여 96년7월부터 미국과 일본 정부사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정검작업이 진행되었고 9월19일에는 기본적 방침을 총괄한 '제1차중간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제2차 중간보고서'는 97년6월8일에 발표되었고 97년 9월23일에 최종보고서(뉴가이드라인)가 나왔다.

제2차 중간보고서는 미일간의 군사협력을 1)평소에 행할 협력, 2)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의 협력, 3) 일본주변지역의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주변사태')의 협력으로 나누고 있다.

이 3분법은 가이드라인78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미일군사협력의 범위는 '일본을 사'에서 '주변사태'로 확대되었고 일본주변지역에서의 미일군사협력에 길을 열기 위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들에 검토항목으로서 열거되었다. '제외일본인보호'를 위한 출동, '인도적 활동'을 명목으로 하는 '피난민의 구조와 이송'을 위한 출동,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제재에 협력한다'는 공해상에서의 강제적 선박검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참가 등등이다.

또 제2차중간보고서 부속의 별표에는 '일본주변지역'에 출동하여 무력행사하는 미군에게 어떻게 협력하는지 40개항목에 걸친 검토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는 '미군에 대한 정보제공', '미군을 위한 공해상에서의 기뢰제거, 미군에 의한 자위대사설이나 민간항만, 공항의 사용, 미군에 대한 물자(무기나 탄약을 제외한), 연료 유통유동의 제공, 일본에 이송된 미군부상자의 치료, 의약품이나 위생기구의 제공, 통신을 위한 주파수(위성통신을 포함함)와 기지의 제공등등이 열거되었다.

나아가서는 '일본은 미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일본이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주변지역의 미군사 행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현재 [주변사태법],[자위대법]의 일부 개정안,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개정안]등의 3개 법안을 중의원에 상정해 놓았다.

이리하여 99년 4월현재, 일본국내에서는 뉴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부 양론이 시민자치단체차원과 중의원(국회)차원에서 들끓고 있다. 오키나와, 고오베, 고오치현, 폭력도동의 할만과 공항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연구회와 공청회를 열고있고 종교단체들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성명서와 요청서를 정부에 보내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뉴가이드라인 특위를 구성하여 3월부터 활동하고 있고 NHK TV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

(4)성명서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 <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채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⁶⁾

한국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19일 오후치 수상에 방한에 임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결의'를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일본대사관에 서한과 설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월 23일 일본 중의원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의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라인)관련법안 채택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에 관련한 한국사회의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일본정부는 1997년 9월에 확정된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New Guideline)을 실효화시키고 유사일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주변사태법>, <ACSA(물류·용역상호제공협정)개정안>, <자위대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변사태라는 이름아래 일본의 자위대는 물론이고 저자재나 민간까지도 총동원해 미군의 전투 또는 전쟁행위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국민 전체에게 전쟁을 강요하는 유사일법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최근 동향은 일본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 피해의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사는 한반도 국민에게 이는 매우 공포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신대할머니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채, 전후처리보상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전쟁체제를 갖춘 뿐만아니라 북한의 로켓발사를 빌미삼아 미일전역미사일 방위구상 공동연구 계획을 세움으로써 정찰위성도입을 서두르며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는 것은 과거 아시아를 짓밟았던 침략자, 일본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첫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를 절대 반대한다.

일-미 동맹체제와 일본의 이런 군사대국화 기도는 북한의 강경체제를 부추기고 중국의 제무강을 자극하며 언제라도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전반에 군비경쟁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철저히 부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는 냉전시대의 긴장이 여전한 한반도나 분쟁잠재지역, 대만해협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역과 전세계에 새로운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 협력의 기류를 가로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멀어지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

둘째, 일본은 신 가이드라인의 관련법 입법화를 철회하고, 명확헌법을 준수하라.

일본은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의 입법화와 군사대국화가 전쟁포기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의

6) 본 성명서는 지난 4월 15일의 설명회 및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이다.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 입법화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지금 일본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군사화나 전쟁준비 대신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평화외교정책을 세우고 과거 전쟁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함께 아시아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전후보상처리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지금 인류는 전쟁과 피로 얼룩진 역사의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새롭게 열리는 천년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외교, 군사문제를 각국 정부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강력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갈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 입제화를 반대하며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한반도와 아시아 및 전세계에 새로운 전쟁의 위험과 긴장을 초래할 군사대국화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1. 일본정부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변 사태법>등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일본을 군사화하는 <유사입법> 기도를 중지하라.
1. 일본정부는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고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 준비 대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존중되지 않을 때는 한국사회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여론화시킬 것이다.

1999년 4월 14일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제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당세연합,

(5)성명서 일어번역본

日本國內閣府大臣 小淵惠三様

差し出し：韓国の9の市民團體（福音連統一協会、民主改革國民連合、民族の和解と統一のための宗教人協議會、自主平和統一民族會議、參與連帶、平和をつくる女性の會、韓國教會女性連合、韓國をリス卜教教會協議會、韓國女性團體連合、以上9團體）

月日：1999年4月14日

件名：日本の軍事大國化と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關連法案の採擇に反對する市民團體の立場表明

1. 小淵首相と日本政府に平和のメッセージを送り、ご挨拶申し上げます。
2. 韓国の女性團體と市民團體は去る3月19日小淵首相の訪韓にあたり、“日本の軍事大國化と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關連法案の採擇に反對する集會”を開き、聲明を發表した後、日本大使館に書簡と聲明書を提出しています。
3. しかし最近我々は、4月23日、日本の衆議院「ガイドライン特別委員會」の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關連法案採擇に關する強硬的なニュースを耳にし、これに對する韓國社會と市民團體の反對の立場を改めてお傳え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れに韓國社會の著名人の立場と市民の思いを集め、別添の通り聲明書と署名をお送りします。
4. さらに、日米防衛協力指針に反對する9つの市民・社會團體は、ガイドライン關連法案を審議している日本衆議院「ガイドライン特別委員會」の法案採擇と衆議院通過に際し、日米「新ガイドライン」關連法案が示している日本の軍事大國化の危険と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に及ぼす影響などについて説明會及び記者會見を開く予定です。
5. 現在韓國社會は冷戰秩序を解體し、和睦と平和の時代に向かつて努力をしています。朝鮮半島の平和と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日米新ガイドラインである關連法案が撤回されるよう日本政府の責任ある對應を求めます。
6. 日本政府と小淵首相の平和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韓国の女性團體と市民團體は、去る3月19日小田首相の訪韓にあたり、「日本の軍事人権化と日本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 閣議決案の採擇に反対する集會」を開き、聲明を発表した後、日本大使館に書翰と聲明書を提供している。しかし、最近我々は、4月23日、日本の衆議院「ガイドライン特別委員會」の日本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 閣議決案採擇に関する衝撃的なニュースを耳にし、これに対する韓国社会と市民團體の反対の立場をここで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最近日本政府は1997年9月に決定された日本防衛協定のための指針「新ガイドライン」を實施化させ、有事立法體制を確立するために今年4月に開かれた國會で「周辺事態法」、「ACSA（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改定案」、「自衛隊法の一部改定案」を通過させようとしている。この法案は周辺事態といふ名の下、日本の自衛隊はもちろんのこと、自治體や民間までもを活動させ、米軍の戦闘または戦争行為を支援するように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日本國民全體に戦争を強要する有事立法の道を開く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日本の最近の動向は、日本の周辺地域に住む人々に非常に衝撃的なものである。日本中國主義と戦争被害の歴史を生きし記憶しており、特に戦争の脅威を担っている朝鮮半島の國民にこれは恐怖のニュースである。特に日本軍「慰安婦」にされた女性たちの苦痛を徹底して無視したまま、戦後處理補償問題も解決していない日本が、再び戦争體制を確立するだけでなく、北朝鮮のロケット發射をきっかけに日本全域にサイバー防衛構想共同研究計畫を立て、偵察衛星導入を急ぎ、軍事人権化の道を再構築することは、過去アジアを踏みしめた侵略者である日本の姿を再現するものであり、これは斷固として見過ごすことはできない。

第一に、日本の軍事人権化の全てを絶對反対する。

日本同盟體制と日本のこのような軍事人権化の企ては、北朝鮮の強行體制を煽り、中國の再武装を刺激し、いつでも朝鮮半島に戦争を引き起こすことができ、東北アジア全般に軍備競争を促すという點から絶對に否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軍事人権化の企ては冷戦時代の緊張が續く朝鮮半島や紛争潜在地域、臺灣海峡を取り囲む東北アジア地域と全世界に、新たな戦争の脅威と緊張を及ぼすであろう。これは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南北間の和解、協力の流れを意欲止め、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に対する希望を遠のかせてしまうことは明らかだ。

第二に、日本は新ガイドラインの閣議決案立法化を撤回し、平和憲法を遵守せよ。

日本は新ガイドライン閣議決案の立法化と軍事人権化が、戦争放棄を保障している日本の平和憲法を違反するという點から、この改定新ガイドライン閣議決案立法化を撤回するのが妥當である。今、日本の安寧と平和のために日本政府が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は、日本の平和憲法の精神に従って軍事化や戦争準備の代わりに對話と協力に基づいた平和の外交政策を打ち立て、過去の戦争に對しての謙遜な姿勢とともに、アジアの戦争被害者に對して戦後補償處理を徹底して行うことだ。

今日人類は戦争と血に染まった歴史の半世紀を送り、新しい千年を目前にしている。我々市民は、新しく目を開ける千年が「戦争のない平和の世紀」となるよう心から願っている。このために我々市民は

。これ以上、外交、軍事問題を各国の政府だけに任せておかないであろうし、戦争を防ぎ平和を実現することに強力なパートナーとしての役割を遂行するであろう。

以上の理由で我々は新ガイドラインである國境法法制化に反対し、以下の事項を強力に要求する。

一、日本政府は朝鮮半島とアジア及び全世界に新たな戦争の脅威と緊張を引き起こす軍事人國法の会を即刻中止せよ。

二、日本政府は国会に上程している「周辺事態法」等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を即時撤回し、日本を軍事化する「有事立法」の会を中止せよ。

三、日本政府は北朝鮮と國境正常化を興り、アメリカは北朝鮮と平和協約を採択し、戦争準備の代わりには朝鮮半島の緊張を緩和し、アジアの平和を定着させる平和政策に轉換せよ。

上の要求事項が貫徹されない場合、韓国社会の市民團體の組織的な反対運動を持続的に強力展開するつもりであり、韓国社会に積極的に討論を働きかけるつもりだ。

1999年4月14日

参加團體：経實連統一協会、民主改革國民連合、民族の和解と統一のための宗教人協議會、自主平和統一民族會議、参列連信、平和をつくる女性の會、韓國教會女性連合、韓國キリスト教教會協議會、韓國女性團體連合、以下團體

(6)[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⁷⁾

요즘 평화문제에서 논의되는 [태평양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을 위한 새 지침]을 요즘 흔히 [미일뉴가이드라인]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그런데 이 지침서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틀이다. 1990년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군사동맹적 성격인 방위조약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팀이 작업을 하여서 1997년9월에 발표한 새 지침서가 바로 이 [뉴가이드라인]이다. 지금 일본정부는 이 [뉴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갖가지 법적 장치를 정비하는 일로 일본국회에 “주변사태법”과 “자위대법개정안”등을 내놓고 있다.

[뉴가이드라인]의 무엇이 문제인가?

[뉴가이드라인]은 첫째, 정상시의 협력, 둘째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의 대처행동, 셋째 일본의 주변사태시의 협력, 이 세가지 분야로 되어있다.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셋째의 일본 ‘주변사태’시의 협력에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이다. 78년도에 맺었던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 이외의 극동에서의 사태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경우의 미일간의 협력”으로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상호연구를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뉴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든 없든 동맹국인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일본이 후방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그 범위도 지금까지의 “극동”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주변”이라는 아주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는 말로 바뀌놓고 있다.

그리고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경우(주변사태)”의 협력으로서 1059항목에 달하는 자세한 세목들이 요구되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아주 유능하고도 순종을 잘 하는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 세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공함을 제공할 것, 민간항만도 제공할 것, 민간의 수송부품도 제공할 것, 전투기를 위해 민간의 정비인력도 제공할 것, 경제봉쇄를 위한 인권을 할 것, 비전투원의 구출을 담당할 것, 수색작전이나 구출작전을 도울 것, 기피소해정 작업을 할 것, 정보를 제공할 것, 해상급유나 물자수송을 책임질 것, 감시나 경계를 맡을 것, 기피제거작업, 부상병의 치료, 미군 전투기나 군함의 수리와 정비,풍풍이다.

7) 위 글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소식지 1999년 여름호(통권 제8호)에 실려있다.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된 '주변사태법'에 의하면 이러한 엄청난 일본전국민 총동원령을 인준한 셈이 된다. 그리고 구제의 협력의 주체는 지금까지는 "자위대나 미군"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양정부"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양국의 정부전체, 나아가서는 지방의 자치단체나 민간업자에게까지 그 주체로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뉴가이드라인과 일본헌법의 관계는?

일본헌법은 1945년 제2차대전 종전을 겪고 평화주의적인 헌법정신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를 가지면서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자랑하고 존중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일뉴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이러한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인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뉴가이드라인을 'War Manual' 전쟁을 위한 지침서라고 번역했던 신문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변사태'에서의 미일군사협력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집단적자위권은 위반"이라고 규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일본의 견해가 왜곡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뉴가이드라인의 채택식을 위한 과정 자체가 헌법의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뉴가이드라인이라는 국회심의회 필요없는 문서로 새로운 미일군 방위 협력 방식이 제시되는 셈인데, 그 내용은 미일안보조약의 틀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 되어있다. 오히려 '미일안보조약의 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조약의 개정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으로 그저 가이드라인이라는 하위문서로 그 해석만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일 없이 정부내閣에서의 협의만으로 실행되었다.

미일뉴가이드라인과 한반도의 평화

뉴가이드라인에서의 '주변사태'는 주로 우리 한반도의 북한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이 위성발사실험을 했을 때, 위성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소동을 일으키며 정부나 자민당이 주변사태법안을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국내에서는 조총련의 소녀들이 한국을 잃고 학교에 가면 칼로 위협하면서 너의 나라에 돌아가라고 위협을 했고 우익단체들은 차를 도시중앙지역에 세워놓고 북한의 위협을 공공연히 확성기로 연일 연설을 했다.

이러한 일본국내의 북한적대적인 상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긴장 완화정책을 펴며 경제교류를 넓히고 금강산관광사업등 화해와 교류의 길을 위

해 애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긴장이 일어나서 이략의 사태처럼 되어 전쟁터가 되지않게 하기위해서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는 승리할지 모르나 이미 우리 한반도 금수강산은 폐허가 될 것이고 많은 우리 민족이 죽을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도 우리 남한도 전쟁을 일으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아시아의 이략으로 북한을 삼을 수 있는 군사동맹을 미국과 맺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국내에서 불리이르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움직임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극할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기로 몰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국가나 군대와 같이 강력한 기존의 권력들의 현상유지를 위한 운동이 아니다. 또한 무기나 군사력을 어느정도 줄이자는 개량적 군축운동도 아니다.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핵무기를 근절시키고 군사력에 필요없는 세상만들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강자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평화”운동을 여성들은 세계 도처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국내의 여성평화운동은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의 전쟁협력범이라 할 수 있는 뉴가이드라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회원들도 그러므로 전쟁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일본의 뉴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반대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모아 이미 일본의 오부치수상과 특별위원회에 보냈고 몇차례에 걸친 가부데오와 성명서도 발표한바 있다. 5월초에 일본중의원 통과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부치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아직도 야당이 많은 참의원의 통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촉발하려는 뉴가이드라인 반대운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참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반대운동은 일본의 시민운동들과 연대하며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글: 김윤옥, 본회 공동대표)

(7)일본의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마련 동향

외무부 동북아 1과 (99.4.27)

◎ 그간의 추진경과

- 미·일 양국은 북한 핵문제(93.94) 등을 계기로 일본 이외의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시 미·일 간의 협력방안 필요성을 인식, 96년 4월 [미·일 신 안보 공동선언]에서 구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기로 합의하고 97년 9월 신 「지침」 채택
 - 구 「지침」(78년 11월 제정)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 침략의 경우에 대비한 미·일간의 협력방안만을 규정
-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신 [지침]에 규정된 [주변사태] 발생시의 미·일간 협력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기 3개 법안을 98년 4월 국회에 제출
 - 주변사태시 미국의 후방지역 지원을 위한 [주변사태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확보 조치법안] (주변사태조치법)
 - 긴급사태시 재외일본인 수송을 위하여 자위대의 선박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의 [자위대법 일부 개정안]
 - 유사시 미국과 자위대간의 물품 및 역무 상호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한 [ACSA(미일 물품역무상호 제공 협정)] 개정안 승인
- 99.4.12 일 국회심의회가 개시된 후,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 간의 [주변사태조치법안]의 수정합의를 거쳐 4.27.(화) 상기 3개 법안 주의원 본회의 통과
 - 민주당은 [주변사태조치법]에 대한 별도의 수정법안 제출(부결), 기타 2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 4.28(수)부터 참의원에서의 심의가 개시되어 5월 중 성립될 것으로 전망

◎ [지침] 관련법안의 주요내용

가. [주변사태법] (제정)

- [주변사태]의 정의
 - “당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 정부는 [주변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조치를 실시하되, 무력에 의한 위협 또

는 무력의 행사는 배제

- [기본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지원, 후방지역 수색·구조 등의 활동에 자위대가 출동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승인](단, 긴급시 [사후승인])

- 자위대에 의한 후방지역 지원, 후방지역 수색·구조 등의 활동 실시

-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시 [외국의 영해내]에서도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조난자 구조 가능

- 후방지역 지원 및 후방지역 수색, 구조 활동시 불가피한 경우 자위대의 무기사용 가능

-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과의 협조 요청 및 의뢰 가능

* 당초 정부원안에 규정된 “公海” 상에서의 선박검사(입검)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 강구

㉔ [자위대법] 개정안

- 긴급시 제외 외국인의 피난을 위한 수송수단에 항공기 외에도 선박, 헬기를 추가

- 동 임무 수행시 자위대원의 생명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의 무기사용 가능

다. [ACSA] 개정안

- 기존의 ACSA가 명시된 아니라 주변사태에서도 적용

- 후방지원 물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무기 및 탄약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8)외교통상부 논평

일본의 [신 비 밀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99. 4. 29.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1. 급변 일본의 중의원을 통과한 [신 비 밀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은 동 법안이 일본의 주변사태 발생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군의 군사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동 법안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이 우리의 영역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앞으로도 우리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을 기대한다.

3. 우리는 동 법안이 발효할 경우, 일본이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를 시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끝]

(9)일본의 [신 미 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논평(4.29)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동입장

우리는 지난 4월 29일 일본의 중의원에서 통과된 [일미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외교통상부 논평과 미온적 대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시민단체의 공동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1. 급변 논평에 의하면, 이 관련 법안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군의 군사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논평하고 있는바, 이는 이 법안이 향후 불려올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냉전을 불러일으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 법안이 내정 간섭과 주권침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이 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2.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서 “법안의 운용에 있어서, 일본이 (중략)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앞으로 우리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이른바 “주변사태”는 “한반도 유사사태”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유사시 일본의 미군 후방지원, 이로 인한 자위대의 한반도 저입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이 향후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놓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3. 정부는 논평을 통해서, “일본이 평화헌법, 전수방위, 미핵 3원칙 등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미 신가이드라인]의 발효가 위의 원칙의 보기를 의미하며,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긴박한 군사화, 냉전화의 흐름에 무기각한 정부의 소극적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분명한 현실인식 아래 [일·미 신 가이드라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과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과 일본과 미국에 보다 자주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9. 5. 3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한국어성단체연합